

“한국판 애플·MS 나올 수 있는 세제혜택·정책금융 지원을”

W 천스닥

④ 한국판 엔비디아의 조건

자본 공급·신산업 성장 지원 필요
‘성장 선별’ 시장으로 체질 개선해야
중기 육성·내수 확대는 생존 전략

“미국 주식 하려고 작년 말에 오래 보유하던 코스닥 종목들 전부 손절했는데, (팔고 나니) 계속 오르네요.”(40대 회사원 이모씨)

“금리 안 내리고 환율도 오른다고 해서 급락할 줄 알았는데, 쉬지 않고 날아 오르네요. 언제까지 이렇게 오를까요?”(개인 투자자 김모씨)

주식은 ‘불안자의 벽’을 타고 오른다고 했던가. 4년 만에 다시 ‘천스닥’(코스닥 1000)에 오른 코스닥 시장에 투자자 관심도 한층 커졌다. 이달 들어 코스닥 시장에 뭉치돈이 몰리며 거래 대금이 하루 평균 14조5000억원을 기록, 지난해 하루 평균 거래대금 7조5000억원을 두 배 가량 웃돈다. 하지만 코스피 거래 대금(평균 26조5000억원)의 55%에 그친다. 작년 같은 기간 코스닥 거래 대금이 코스피의 평균 60.86%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낮다. 주가 부양에 주력하는 정부가 모험 자본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코스닥 부흥 작업에 착수하면서, 최근 분위기가 달라진데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외국인들을 불러모으고, 해외 증시에 있는 개미(개



ChatGPT로 생성한 ‘정부 지원에 힘입어 성장하는 코스닥 시장’ 이미지.

인 투자자)들의 발길을 돌리려면 코스닥 기업들의 기초체력(펀더멘탈)을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그래야 정책효과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짝효과 그친 정부 정책

정부는 신뢰, 주주 보호, 혁신, 선순환 4가지 핵심 원칙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기록적인 코스피 랠리에도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코스닥벤처펀드 세제 혜택 확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증권사 종합투자계좌(IMA)를 통한 모험자본 공급 등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상장 유지 요건을 강화해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로 재설계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코스닥을 버티는 시장이 아닌, 성장하는 시장으로 바꾸기 위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덕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코스닥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2월 중으로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해 코스닥벤처펀드의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를 확대하고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해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에 주는 믿음은 여전히 약하다. 이달 들어 개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6조9000억원 어치를 팔았다. 외국인도 매도 우위다.

시장이 특정 업종에 치우친 편중성, 그로 인한 높은 변동성 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코스닥이 벤치마킹한 미국의 나스닥은 지금도 애플·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 같은 초우량 기업이 지수를 견인한다. 반면 코스닥은 시총 상위권에 있던 우량주들이 자금 조달의 안정성과 기업 이미

지 등을 이유로 코스피로 옮겨가는 ‘엑소더스’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좀비기업’으로 불리는 부실기업 퇴출이 늦어지고,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시장의 신뢰를 낮추는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된다.

과거에도 정부 차원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시도는 수차례 있었다. 그러나 주가 부양 효과는 길어 봐야 1년에 못 미치는 비슷한 결말을 맞았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초,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합친 통합 거래소를 출범했다. 무분별한 벤처 인증을 줄이는 작업을 벌이고, 재정이 투입된 모태펀드를 조성해 돈을 공급했다. 그러나 오히려 코스피보다 ‘하위 호환’이라는 인식이 굳어지며 우량주가 이탈했다. 코스닥 지수는 2005년 한 해 100% 올랐다가 이듬해 40% 고꾸라졌다.

‘창조 경제’를 기치로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 때도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나왔다. 중소기업 전문으로 상장 문턱을 낮춘 코넥스시장 개장, 충분한 매출 없이도 기술력을 보고 상장시켜 주는 ‘기술 특례’ 제도도 처음 도입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에는 이른바 ‘테슬라 요건’을 도입해 이익 못 내는 기업이라도 성장성을 보고 상장 특례를 허용해줬다. ‘코스닥 벤처펀드’도 도입해 투자금 3000만원 한도까지 10%를 소득공제해줬다. 절세를 노린 부자

들의 돈이 몰려들었지만, 자금이 주식보다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으로 쏠렸다.

◆지수보다 기업, 밸리보다 생태계

한국판 엔비디아·애플·MS는 정책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시장에서는 코스닥 기업의 체력(실적)을 키울 근본적인 처방에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래야 외국인도 투자한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사례를 보면 코스닥 정책 효과는 단순한 규제 정비나 시장 안정 중심 정책보다는, 정책 자금 유입과 특정 성장 산업 육성을 동반한 경우에 시가총액 확대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특히 자본 공급과 신산업 성장 지원이 동시에 추진될 때 코스닥 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현 시점과 가장 유사한 코스닥 활성화 정책 사례는 2017년이다. 당시 코스닥을 혁신기업의 성장 플랫폼으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세제 혜택 확대와 정책 금융 지원이 동시에 추진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정책이 본격화된 이후 코스닥 시가총액은 64% 증가했다. NH투자증권은 이번에도 2017년과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는 가정 하에,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2025년 12월 기준 약 500조원에서 중기적으로 820조원대 수준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김대중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구조에서 중소기업 육성과 내수 기반 확대는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미래에셋證, 국내 최초 디지털채권 1000억 조달

글로벌 수준 디지털 금융 표준 도입
전과정 자동화… 금융시스템 효율 ↑

미래에셋증권은 국내 금융권 최초로 1000억원 규모의 디지털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디지털 채권은 홍콩 달러(HKD) 3억2500만 달러와 미국 달러(USD) 3000만 달러로 동시 발행됐다.

주간사는 HSBC, 보조주간사는 미래에셋증권 홍콩법인인 담당했으며, 초기 안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모(Private Placement) 모집 방식을 채택했다. 발행 과정에는 홍콩 금융관리국(HKMA) 공식 채권결제 인프라인 CMU(Central Moneymarkets Unit)와 연계된 HSBC 자체 토큰화 플랫폼 ‘오라이언



미래에셋증권 본사 전경. /미래에셋증권

(Orion)’이 활용됐다. 이는 홍콩 정부의 디지털 그린 본드와 동일한 기술적 기반 위에서 설계된 블록체인 인프라로,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 금융 표준을 국내 금융사가 선제적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고 미래에셋증권은 설명했다.

디지털 채권은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기술(DLT)을 활용해 발행·유통되는 채권이다. 분산원장기술을 통해 발행, 이차 지급, 상환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상에 기록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디지털 자산 투자 환경을 제공받게 된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성공 사례는 단순한 자금조달을 넘어 디지털 기술을 통한 국경 없는 자본 조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다중통화 동시 조달을 통해 환전 비용과 결제 시차를 제거한 것 역시 국내 금융사가 글로벌 무대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본 효율성을 한 단계 끌어올린 사례로 평가된다고 미래에셋증권은 부연했다.

특히 이번 채권 발행은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을 아우르는 고도화된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미래에셋 3.0’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고 미래에셋증권 측은 설명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번 디지털 채권 발행 성공은 대한민국 금융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표준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이정표”라며 “확장된 금융 생태계를 통해 개인 투자자부터 기관에 이르기까지 혁신적인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금융 허브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금감원 상생·협력 금융상품 선정

신한은행·KB국민은행·KB손해보험·메트라이프생명보험 등 4개 금융사의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제7호 우수사례 시상식을 열고,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4개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회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와 고통분담 또는 이익나눔 성격이 있는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정기적으로 발표해왔다. 이번 공모에는 총 21건이 접수됐다.

은행 부문에서는 신한은행의 ‘뽕겨요 이차보전 대출’과 KB국민은행의 ‘신용대출 채무조정상품 4중 금리 인하’가 선정됐다. KB국민은행은 신용대출 채무조정상품 신규 금리를 최대 3.5%포인트 인하해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했다.

보험 부문에서는 KB손해보험의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과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의 ‘무배당 고마워요 소방관 보험’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소비자 효용과 판매 실적 등이 우수한 금융회사 3곳을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금감원장 포상을 수여했다.

/허정윤 기자

하나증권, 데이터젠과 한돈 투자증권 공모

제1호 가축투자계약증권 추진

하나증권은 핀테크 기업인 데이터젠과 함께 국산 돼지(한돈)을 기초자산으로 한 ‘가축투자계약증권 제1호’ 공모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한돈을 기초자산으로 매

일부터 사육, 출하, 매각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공동사업으로 구성한 실물자산 기반 투자계약증권으로, 투자자는 증권 보유 비율에 따라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 지분권을 취득하고 손익을 배분받는다.

총 모집금액은 2억1624만원이다. 단위당 모집가액은 2만원, 모집 수량은 1

만812주다.

하나증권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데이터젠과 함께 상품 구조 설계부터 공모, 청약 및 자금 관리에 이르기까지 약 1년 6개월간 한돈 투자계약증권 발행 전반에 대한 자문과 구조 설계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품의 수익 배분 구조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정교하게 설계해 한돈이라는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일반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는 투자

계약증권으로 구현했다”고 전했다.

양사는 이번 공모를 통해 한돈을 기초자산으로 한 투자계약증권의 공모·운영·정산 전 과정을 제도권 내에서 실행하고, 향후 동일한 구조의 상품을 순차적으로 추가 발행해 공모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토큰증권(STO) 법제화에 발맞춰 투자계약증권 구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증권 형태로의 확장이 가능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